



KOTRA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배포합니다.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

📧 주요 내용

🎯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및 6가지 관전 포인트 2
- (관세) USTR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 관련 주요국 대응 5

🌐 미국 경제통상 동향

- (수출통제) 美 의회, 대중 AI 수출통제 보완 필요성 제기 보고서 발간 8
- (입법동향) 美 하원,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법안 패키지 추진 8
- (핵심광물) 미 에너지부, 갈륨 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5개 기관 선정 9
- (통상) 美 ITC, 중국 PNTR 철회 경제적 영향 조사...업계는 공급망 충격 우려 10

⚖️ 의회법안 동향

- 의약품·수출통제·환율정책 등 하원 발의 총 3건 11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12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13

📅 미국 경제통상 주요일정

4.21(화)	• 3월 미국 소매 판매(U.S. retail sales)
4.22(수)	• 일정 없음(None scheduled)
4.23(목)	• 4월 3주 실업수당 청구건수(Initial jobless claims)
4.24(금)	• 4월 소비자 심리지수(Consumer sentiment final)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및 6가지 관전 포인트

- 선거 결과에 따라 관세·무역·이민·세제·에너지·의료 등 정책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 불가피

1. 선거 개요

- 올해 11월 3일, 트럼프 대통령 2기 재임 중 중간선거 실시 예정
 - 하원 전 435석과 상원 100석 중 35석이 경합하여, 제120대 의회 구성 결정
 - 36개 주에서 실시되는 주지사 선거는 '28년 대선 구도를 가늠할 지표로 평가
-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정책에 대한 사실상 신임투표의 성격 내포
 - 관세·무역·이민·환경 등 핵심 정책에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계기가 될 전망

〈상·하원 다수당 교체 시나리오〉

[상원]			[하원]		
공화당 53석 (방어 22석)		민주당 47석 (방어 13석) <small>*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2 포함</small>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
정규 선거 33석 <small>(6년 임기)</small>	보궐선거 2석 <small>플로리다 (루비오 사퇴) 오하이오 (벤스 사퇴)</small>	민주당 탈환 목표 순증 4석 필요	전 435석 선거 <small>(2년 임기)</small>	경합 선거구 42개 <small>현직: 민주당 22 / 공화당 20</small>	민주당 탈환 목표 순증 3석 필요

2. 관전포인트

1 민주당은 상원까지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

-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다수당 탈환 가능성 우세 전망
 - 총 435개 선거구 중 민주당 우세 212곳, 공화당 우세 205곳, 경합 지역 18곳 분류
 - * 여론조사 종합 결과, 민주당의 탈환 가능성을 70.5%로 전망 (270toWin, 4월 현재)
- 상원은 구조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한 구도나, 최근 민주당 승리에 대한 기대 고조
 -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과 물가 상승 등 경제 요인이 부각되면서, 일각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까지 탈환하는 시나리오 제기
 - 민주당의 상원 승리 방정식은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알래스카에서 공화당 의석 탈환 + 미시간에서 기존 민주당 의석 유지 = 총 51석 확보

2 중간선거, 역사적 패턴이 반복될 것인가?

- 역사적으로 중간선거는 집권 여당의 패배로 귀결된 사례가 대다수
 - 1938년~2022년 22번의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하원 의석을 잃은 사례가 20차례에 달함. (2번의 예외는 911테러 직후, 클린턴 탄핵 시도 후 역풍과 같은 특수 상황)
- 유권자 정당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5.6%p 차이로 앞서
 - * 2024년 선거 직전 최종 정당 선호도는 공화당이 민주당에 2.7%p로 우위 기록
- 현재 지지율 추세가 11월까지 유지되면, 민주당 선호도가 약 8.3%p 개선되는 'Midterm Swing'이 발생, 두 자릿수 의석 증가 가능 예측 (브루킹스 연구소, '25.5월)

3 이번에도 문제는 경제일까?

-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 지지율은 최저 수준으로 하락
 - * 물가(가격) 정책 관련 유권자 지지율이 1년 사이 40%(25.4월) → 32%(26.4월)로 하락 (NBC, 4.19)
-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주요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권 여당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
- △관세, 인플레이션 △의료비 부담 △에너지, 유가 △주거비용 △고용, 노동 시장 동향 등이 중간선거 직전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

4 선거구 재획정(redistricting)의 파급 효과는?

-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은 1960년대 이후 최대 선거구 재획정 국면에 직면
 - 텍사스 선거구 재편으로 시작된 '재획정' 논란은 이후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등으로 확산했고, 현재 플로리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이 재획정 논의 중
 - * 전체 435개 하원 선거구의 약 30%가 재획정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석 (VOTEBEAT, '25.12월)
- 확정 또는 논의 중인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도, 여전히 민주당 하원 탈환 유력
 - 전체적으로 공화당은 최대 14석, 민주당은 최대 12석의 순증이 예상되며, 전국 기준으로 공화당이 약 2~4석 정도 우위를 확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이번 선거구 재획정은 의회 민주주의와 기능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중도 성향 의원의 입지 약화에 따른 △의회 내 양극화 심화 △유권자 혼란 및 정치적 이탈 △소수인종 대표성 약화 △유사한 선거구 불확실성 반복 등 부작용 전망

5 주지사 선거, 2028년 대선의 리트머스인가?

- 36개 주지사 선거 중 6개 주*가 지난 대선에서 경합을 벌인 ‘스윙스테이트’로 분류
 - 이번 6개 주지사 선거 결과는 단순히 주 정부 권력 교체를 넘어, 2028년 차기 대선의 경로를 예측하는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것으로 분석
 - *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 2024년 대선 당시, 이번 주지사 선거가 열리는 6개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승
 - 선거가 치러지는 경합주 6개 주에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은 총 77명으로, 차기 대선에서 승리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 확보를 위한 핵심 교두보로 평가
 - 현재 기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바다 등 5개 주에서 민주당 소속 현직 주지사 또는 후보가 높은 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6 선거 결과에 따른 트럼프 정책의 향배는?

- 중간선거 결과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잔여 2년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분수령
 - 민주당의 상·하원 탈환 또는 공화당의 수성 여부에 따라 관세, 무역, 이민, 세제, 에너지, 의료 등 정책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 불가피 전망

〈중간선거 결과 시나리오별 트럼프 정책 향배 전망〉

정책 영역	① 민주당 하원 탈환	② 민주당 상·하원 탈환	③ 공화당 상·하원 수성
관세 · 무역	· 관세 제한 입법 추진 · 무역협정 의회 비준권 강화 · 행정부 관세 권한 축소 추진	· 관세 권한 대폭 제한 입법 · 무역협정 재협상 시도 · 의회 결의로써 행정조치 무산	· 법률에 기반한 관세 재가동 · 추가 무역협정 추진
이민 · 국경	· 이민 단속 추방 예산 축소 · 의회 예산 삭감으로 집행력 약화 · 행정명령으로 정책 추진	· 이민 단속 강화 입법 전면 봉쇄 · 이민 정책 관련 국정조사 추진	· 추가 불법 이민자 추방 확대 · 합법적 이민 축소 및 규제 강화 · 국경안보 관련 예산 대폭 확대
세제 · 재정	· 정부 예산 입법 교착 지속 · 트럼프 감세 정책에 제동 예상	· 부유층/법인 증세 추진 · 정부·의회 예산 마찰 심화	· 감세 추가 영구화 추진 · 관세를 통한 재정 보완
에너지 · 환경	· 환경규제 복원 입법 시도 · 친환경 세액공제 복원 시도	· 기후 정책 예산 확대 ·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 재가동	· 친환경 세액공제 추가 폐지 · 원유 및 LNG 개발/수출 확대
의료 · 복지	· 메디케이드 추가 삭감 저지 · ACA 보조금 복원 입법	· 메디케이드 삭감 복원 입법 · ACA 지원 강화 · 약가 통제 강화	· 메디케이드 삭감 완전 시행 · ACA 약화 지속 및 폐지 시도
행정 권력	· 행정부 견제 청문회 시작 · 인사 인준 방해 및 예산 삭감	· 탄핵 발의 가능성 · 의회 조사 전방위 실시 · 연방 기관 예산 압박	· 독립 규제기관 통제 강화 · 연준에 대한 정부 영향력 강화 · 사법부 추가 임명 강행

[자료] 현지 언론 및 연구소 자료 종합 정리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 270toWin(4월 현재), 뉴욕타임즈(4.20), 브루킹스연구소(25.5.28), NBC(4.19) 등

(관세) USTR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 관련 주요국 대응

- USTR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주요 국가들의 공식 대응 의견 제출
- 각국은 비시장적 왜곡과 과잉생산을 부정하고 대미 무역의 상호 보완성과 피해 부재를 강조, 301조 조사보다 양자 협력 및 다자 협의가 적절하다는 의견 제시

1. 개요

□ USTR,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주요 국가들의 공식 대응 의견 제출

- 특정 경제권의 산업정책, 보조금, 생산투자 구조, 공급망 내 노동 기준 이행 여부 조사
 - 미국 측은 정부 개입으로 인한 과잉생산 여부, 미국 산업 피해, 공급망 내 강제노동 연계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판단
 - 이에 대해 주요 국가들은 자국 정책이 WTO 규범·국제 노동 기구(ILO) 기준 및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적극 반박

2. 상세

□ 공통 대응 논리 구조

- 각국은 비시장적 왜곡과 과잉생산을 부정하고 대미 무역의 상호 보완성과 피해 부재를 강조하며 301조 조사보다 양자 협력이 적절하다는 의견 제시
 -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하여 ILO 협약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반영한 국내 법·제도 및 집행 체계를 이미 구축·운영 중임을 강조
 - 생산, 투자, 무역 구조가 정부 개입이 아닌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며, 보조금·국영기업·수출지원 등 비시장적 왜곡이나 구조적 과잉생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주장
 - 대미 무역 구조가 상호보완적이며, 미국 산업과 경쟁보다 공급망 지원 및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고 있어 미국 상업에 대한 부담이나 피해가 없음을 강조
 - 301조 조사와 같은 일방적 조치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양자 협의, 국제 협력, WTO 등 다자체계를 통한 해결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제시

□ 주요국은 피해 부재·인과 관계 부정, 미국은 피해 사실 증명 여부가 관건

- 공급망 상호 의존성을 근거로 제제 시 미국 기업 피해를 강조하며 301조 조치의 부메랑 효과 부가하는 역압박 전략
- 각국은 미국 산업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자국의 산업정책과 미국 산업 피해 사이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아 301조 조사 정당성은 없다고 주장
- 향후 미국의 입증책임은 ▲정부 보조금 등 정책 개입, ▲강제노동 연계 증거, ▲미국 산업 피해의 인과관계 규명 여부로 집중될 전망

〈301조 강제 노동 조사에 대한 주요국 의견〉

국가명	주요 내용
페루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국내·법·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대미 교역도 미국에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통상조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모로코	강제노동을 법으로 금지·단속하고 대미 무역도 미국 흑자이므로 301조 제재 근거가 없다는 주장
노르웨이	강력한 국내법과 국제 협력 및 공급망 실사 제도를 통해 강제 노동을 적극적으로 금지·예방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301조 조사에 따른 제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와 강제노동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발전과 산업 인식 제고를 통해 강제노동 근절 의지를 강조하며 미국의 인정을 요청
뉴질랜드	높은 노동 기준과 국제 협력,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강제노동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대미 무역 구조상 위험이 낮아 미국의 제재는 불균형적이고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
인도	강제노동 관한 국내 법·국제협약 준수와 집행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의 301조 조사에 특정 위반 행위나 무역 피해 근거가 부족하므로 조사 및 제재는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부당하다고 주장
브라질	자국의 정책이 강제노동 관련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301조 조사 대상이 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일방적 조치 대신 협력과 다자 협력을 통한 해결을 촉구
캄보디아	양자 협정과 국내법·ILO 기준에 따라 강제노동 금지통제 체계를 운영 중이므로 301조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인도네시아	강력한 국내법·ILO 협약·감독체계를 통해 강제노동을 전면 금지·단속하고 있으며, 미-인도네시아 양자협정 및 수입 금지 규정까지 이미 시행 중이므로 301조 조치나 추가 관세는 근거 없다고 주장
일본	국제 기준과 미·일 합의에 따라 기업 인권실사와 가이드라인을 이행 중이므로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대상이 될 근거가 없다는 입장
싱가포르	국내법·인사매매 방지 체계와 미·싱가포르 협력으로 강제노동에 대응하고 있어 301조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베트남	강제노동을 금지·근절하기 위한 포괄적 제도와 국제 협력을 이미 시행 중이며, 별도의 수입 금지 조치 없이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301조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캐나다	강제노동 금지 및 공급망 보호를 위한 강력한 국내 법·집행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미-캐나다 협력을 바탕으로 301조 조사 관련 우려에 대해 건설적 협의와 제도 개선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

[자료: USTR]

〈301조 과잉생산에 대한 주요국 의견〉

국가명	주요 내용
노르웨이	시장 기반의 균형 성장·완전 고용·안정적 투자와 수익성을 보이는 개방경제로서 정부가 구조적 과잉생산을 유도하거나 유지한 적이 없으므로 301조 조사의 구조적 과잉생산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
말레이시아	시장 기반 제조·수출 구조로 과잉생산이나 미국 교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고, 미 기업 공급망을 지원하는 중간재 공급국이므로 301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베트남	자국의 정책이 과잉생산을 초래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므로, 301조 조치 대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
인도	제조업이 시장·내수 기반이라 구조적 공급과잉이 없고, 거시지표에 근거한 301조 조사는 법적 요건 미충족이므로 301조 조사 종료를 요구한다는 입장
캄보디아	의류·신발 중심의 시장 수요 기반 제조로 정부 보조나 과잉설비 없이 미국 상업을 저해하지 않는 보완적 공급망 파트너라는 입장
인도네시아	무역흑자와 생산 구조가 비교우위와 시장 요인에 따른 것일 뿐 과잉생산이나 정책 왜곡의 결과가 아니며, 이미 양자 협정을 통해 미국의 우려도 해소된 만큼 301조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일본	자국 산업·통상 정책이 국제 규범에 부합하며 비시장적 관행이나 구조적 과잉설비가 없고, 미·일 협력과 투자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301조 조사 대상이 될 사안이 없다는 입장
싱가포르	높은 산업 가동률과 시장 기반 정책을 바탕으로 과잉설비 없이 글로벌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오히려 지속적 무역흑자 관계를 형성하는 상호보완적 파트너라는 입장

[자료: USTR]

- | | |
|-------|------------------------|
|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김기범 |
| ▪ 자료원 | USTR(3.16), 인사이드(4.15) |

(수출통제) 美 의회, 대중 AI 수출통제 보완 필요성 제기 보고서 발간

- 美 하원 특위, 중국의 첨단 AI 확보 차단을 위해 클라우드·제3국 경유 등 대중 수출통제 사각지대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보고서 발표(4.16)

* BUY WHAT IT CAN, STEAL WHAT IT MUST (원문)

- 동 보고서는 현행 대중 수출통제가 첨단 AI 칩 일부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통제 기준 근접 AI 칩, 제3국 경유, 클라우드 원격 접근 등을 통한 규제 우회 가능성 지적
- 특히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등 제3국의 AI 인프라를 통한 접근과 제한 대상 칩의 불법 반입 등을 통해 첨단 AI 역량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
- 중국의 AI 산업은 여전히 미국 및 서방의 반도체 장비, AI 칩, 고대역폭메모리 (HBM), 클라우드 연산자원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 이에 따라 동 보고서는 동맹국 공조 강화, 우려국 대상 AI 칩 수출허가 강화, 중국 생산능력을 반영한 수출 제한, 클라우드 원격 접근 통제 등 관련 입법 필요성 제시

▪ 자료원 | 인사이드(4.16)

(입법동향) 美 하원,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법안 패키지 추진

-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제조장비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약 16개 법안을 4월 22일 표결 예정

- 반도체 장비 접근 제한 법안(MATCH Act, HR 8170), 반도체 밀수 신고 프로그램 신설 법안(Stop Stealing Our Chips Act, HR 6322) 등 포함

- 이번 법안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엔비디아·AMD 등 대중 반도체 수출 일부 완화 추진 직후 마련된 것으로, 기존 정책보다 강경한 규제 방향 제시

* 특히,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내 내부고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대중 반도체 우회 수출 차단 목적

** 일부는 2026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행정부와의 사전 협의 진행 중

- 한편, 미 의회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초당적으로 수출통제 권한 및 의회 감독 강화 추진
 - 이러한 기조 속에 AI OVERWATCH Act(대중 AI칩 수출 시 의회 승인 의무화), Chip Security Act(반도체 밀수 방지) 등도 각각 '26년 1월과 3월에 위원회 통과
 - 현지 언론은 이번 동향을 대중 반도체·AI 기술 견제를 위한 입법 패키지 확대 움직임으로 해석,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및 수출 규제 환경에 영향에 주목
- 자료원 | 폴리τικο(4.14), HR 8170 (링크), HR 6322 (링크)

(핵심광물) 미 에너지부, 갈륨 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5개 기관 선정

- 미 에너지부 핵심광물·에너지혁신실(CMEI)은 갈륨 국내 공급망 구축 지원을 위해 약 540만 달러 규모의 5개 프로젝트 선정 발표
 - 에너지부는 이번 사업이 약 40년 만의 국내 1차 갈륨 회수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핵심광물 생산 역량 확대와 해외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추진
 - * 미국은 현재 갈륨 순수입 의존도 100%로, 1987년 이후 국내 생산이 없는 상태
 - 갈륨 프로젝트(TRACE-Ga)에 5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미국 내 금속 가공 원료에서 갈륨을 회수하는 혁신적·비용효율적 기술의 신속한 시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
 - * PHNX Materials Inc., Atlantic Alumina Company, LLC, Found Energy Co, Kunin Technologies, Inc., Indium Corporation
 - 개별 프로젝트는 폐기물, Bayer liquor, 고농도 금속 스트림, 재활용 스크랩 등으로부터 갈륨을 회수하는 기술 개발에 중점
 - 다만 이번 선정은 지원 협상 대상 선정에 해당하며, 최종 지원 확정이나 실제 자금 제공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지원 규모도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
- 자료원 | 에너지부(4.14)

(통상) 美 ITC, 중국 PNTR 철회 경제적 영향 조사...업계는 공급망 충격 우려

- 단계적 폐지·즉각 철회 입장 차 뚜렷, ITC 결과보고서 입법 논의 분수령 전망
 - ITC는 의회 지시로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철회 시 경제·공급망 영향을 분석하는 조사(332-609)를 2월 개시, 안보 품목 대상 즉각 철회 및 5년 단계적 관세 인상 시나리오를 병행 검토 진행 중으로 8월 21일 발표 예정
 - (단계적 폐지)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5년 유예도 불충분하다고 경고 — NATTBatt International은 배터리 생태계 구축에 최소 7~10년이 소요됨을 근거로 10년 유예를 제안하였고, USCIB는 5년 전환이 중소기업에 불충분하다고 지적
 - (즉각 철회)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CPA) 및 전국섬유단체협의회(NCTO) 등은 단계적 철폐가 탈중국 투자 유인을 약화시킨다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중국 의존 축소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
 - 업계 간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ITC 결과보고서는 향후 의회의 입법 논의에 핵심 근거로 활용될 전망
 - * PNTR 철회 시 중국산 제품에는 현행 최혜국(MFN) Column 1 세율 대신 러시아·북한 등에 적용되는 Column 2 고율 관세 부과
- 자료원 | 인사이트([4.21](#)), USITC([2.26](#)), USCIB([4.13](#))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의약품 (4.14)	H.R.8269 (하) (4.14)	Richard McCormick (공)	<p>〈투명한 의약품 라벨 표시법(Consumer Labeling for Enhanced API Reporting and Legitimate Accountability for Base Entity Listings (CLEAR LABELS)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약품 라벨에 원제조사 및 공급망 정보를 포함하도록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FDCA)을 개정하는 법안 즉, 처방약 라벨에 의약품 및 API의 원제조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
수출통제 (4.15)	H.R.8284~85 (하) (4.15)	Michael McCaul, Darell Issa (공)	<p>〈산업안보국(BIS) 허가 행정 강화법(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License Administration Enhancement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8284: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따른 미국의 수출통제 허가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민감 기술에 대한 심사 투명성 제고, 허가 거부 기준 명확화·강화 추진법 8285: 특정 기술의 수출·재수출·국내 이전 허가 신청 시,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법안
수출통제 (4.15)	H.R.8287~89 (하) (4.15)	Greg Stanton, Amo Gabe, Gregory Meeks, (민)	<p>〈미·중 반도체 수출통제 효과 평가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8287: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차관보가 중국을 대상으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요구법 8288: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기관이 해당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과 보조 제공 8289: 수출통제 허가 신청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을 개정하는 법안

* 4월 21일(화) 15:00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p><u>Tim Cook Built Apple Into a \$4 Trillion Powerhouse. He Leaves Big Challenges on AI.</u> (팀 쿡, 애플 4조 달러 기업으로 키웠지만 AI 과제 남겨)</p>
	<p>애플의 CEO 팀 쿡은 재임 기간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4조 달러를 돌파했지만,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경쟁사 대비 뒤처진 상황에서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p>
The Washington Post	<p><u>Virginians vote on redrawing congressional map to favor Democrats</u> (버지니아, 민주당 유리한 선거구 재조정 주민투표 실시)</p>
	<p>버지니아 유권자들이 하원 의석을 최대 4석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늘릴 수 있는 선거구 재조정 주민투표에 참여,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의석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당의 고비용·고위험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p>
The New York Times	<p><u>Trust Trump? Iran's Doubts Shadow Peace Talks.</u> (트럼프 신뢰할 수 있나...이란의 불신 속 평화 협상 먹구름)</p>
	<p>이란 지도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장기간 협상을 거쳐 체결된 핵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전례를 들어, 이번 협상에서도 다시 합의가 반복될 수 있다 우려 가져</p>
CNN	<p><u>An unintended consequence of US immigration policy: Some fans are skipping the World Cup in the US</u> (미국 이민 정책 여파로 일부 팬들 월드컵 미국 방문 포기)</p>
	<p>월드컵 개막을 두 달 앞두고 휴스턴 관광청에 따르면 예약의 85%는 미국 내 수요로 해외 방문객 중 대다수 영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뒤따랐으며 일부 관광객은 관전 포기</p>
USA Today	<p><u>Shreveport massacre shocked Americans</u> (루이지애나 총격 사건에 충격 빠진 미국)</p>
	<p>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한 남성이 자녀와 조카를 포함한 어린이 8명을 총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미 전역 충격에 빠져</p>

* 미국 동부 시간 4월 21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10	제14차 WTO 각료회의 주요 논의 동향 및 향후 전망	2026.4월
US26-09	美, 과잉공급·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3월
US26-08	미국 2025년 수출입 동향 분석 및 향후 전망	2026.3월
US26-07	2026 워싱턴 국제무역회의 주요내용 및 전망	2026.3월
US26-06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에 따른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평가	2026.2월
US26-05	트럼프 정부의 IEEPA 관세 대안으로 수입 면허제 활용 가능성 검토	2026.2월
US26-04	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 경제·통상 성과 및 현지 평가	2026.2월
US26-03	2026년 주요 통상 일정과 미국 통상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6-02	유엔과 세계은행이 전망한 2026년 세계 경제 및 정책 제언	2026.1월
US26-01	2026년 글로벌 핵심 리스크와 미국 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5-51	골드만삭스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50	美 2026 국방수권법(NDAA)로 살펴본 미국 국방정책 방향	2025.12월
US25-49	미·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USCC) 의회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8	워싱턴 국제무역협회 'Trade & Tech Summit'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7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둘러싼 미국의 인식 전환과 통상 질서 변화	2025.12월
US25-46	2026년 USMCA 공동재검토 주요 일정 및 3국 입장과 현지 평가	2025.12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 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26 (2026.2.6.)		
코인사-25 (2026.1.24.)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